

금융회사의 개인신용 평가능력 제고방안 정책 세미나

☐ 일 시 : 12. 15(월) 14:00 ~ 16:00

☐ 장 소 : 은행연합회 14층 세미나실

☐ 사 회 : 강병호 한양대 교수

☐ 주제발표

- 신인석 KDI 연구위원 : 개인신용정보 유통체제의 개선
- 이균희 서강대 교수 : 금융회사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 개선

☐ 토론자

- 이재우 신한은행 부행장
- 서근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비은행금융기관 팀장)
- 윤창현 명지대 무역학과 교수
-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 주 관 : 한국개발연구원 (KDI)

☐ 후 원 : 금융감독위원회, 재정경제부

목 차

I . 추진배경	1
----------------	---

II . 주요 정책과제

1. 개인신용정보 유통체제의 개선

가. 현행 체제의 평가	2
--------------------	---

나. 대안검토	4
---------------	---

다. 개선방안	5
---------------	---

2. 금융회사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 개선

가. 현행 시스템의 평가	13
---------------------	----

나. 개선방안	16
---------------	----

<부록> 개인신용평가시스템 개선 사례	22
----------------------------	----

I. 추진 배경

- IMF 경제위기 이후 금융회사의 자금공급 패턴이 기업 금융에서 가계금융으로 급격히 전환
 - 이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위험 평가능력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크게 증가하고 금융회사의 부실화 우려 제기
- 앞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고 신용불량자의 추가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위험 관리기능을 제고하는 것이 당면과제
- 이에 따라 정부는 「2003년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03.7.14)에서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위험 평가능력을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으며
 - 이에 따라 지난 8월부터 관계부처·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중심으로 작업이 추진되어 왔음
- 본 T/F에서는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위험 평가능력 제고를 위해
 - ① 개인신용정보 유통체제의 개선 ② 금융회사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 개선 등에 대한 방안을 강구

II. 주요 정책과제

1. 개인신용정보 유통체제의 개선

가. 현행 체제의 평가

현황

- 은행연합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서 연체정보 등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유통을 담당하고 신용조회업 인가를 받은 민간 신용정보업자(CB)도 관련 기능을 수행

	은행연합회	민간 신용정보업자(CB)
수집방법	신용정보관리 규약에 의거하여 일정범위의 신용정보를 강제집중	금융회사 등과 정보공유 협약 체결 은행연합회 정보수집, 신용조사
수집 대상기관	금융회사 등 약 5,000개 기관 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 수집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한편, 약160개 기관 등과 네트워크를 구성·수집중
정보제공 방법	단순 조회만 가능, 가공·평가 불가	단순조회 및 가공·평가서비스 제공

- 현행 개인신용정보 유통체제는 사실상 ‘공적신용정보 유통기구’인 은행연합회에 의해 지배되는 특징을 보유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는 외형상 민간기구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법규에 의해 그 권한과 기능이 세밀히 규제되고 독점적 지위가 부여되고 있어 사실상 공적기구의 성격을 띠고 있음

- 민간 신용정보업자의 기능이 아직 미흡하여 은행연합회에 집중되고 있는 연체정보 등 불량정보 중심의 신용정보 유통체계가 형성

평 가

□ 현행 신용정보 유통체제는 일정 범위의 정보집중과 유통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장점이 있으나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음

○ 종합정보집중기관의 정체성 문제 (외형 민간기구, 실질 공적기구) 등으로 민간 신용정보업의 발전이 지체

* 사실상 공적기구인 종합정보집중기관의 업무영역 확대 가능성 등으로 인해 민간 신용정보업의 경쟁환경이 불확실하여 장기적인 비전 수립 및 투자가 위축

○ 공적기구형의 정보집중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경제적 요인에 의한 신용정보 유통체제의 효율성 저해위험 상존

* 신용불량자 등록기준 상향조정, 연체금 상환자에 대한 신용불량정보 사후관리기록 일괄삭제 등

□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위험 평가의 기초가 되는 신용정보의 양적·질적 개선이 지연

○ 대출상환 실적 등 우량정보 확충이 지연되고, 민간 신용정보업자의 체계적 정보가공·평가 능력도 낙후

○ 금융회사는 체계적인 신용위험 평가없이 신용불량자 등록여부만을 획일적인 신용공여 거절기준으로 사용하여 개인 신용도에 상응한 차별적인 금융거래관행 미흡

나. 대안검토

□ 공적기구형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유지여부에 따라 세 가지 대안이 가능

① 공적기구 전담체제 ② 민간기구 전담체제 ③ 공적기구·민간기구 공존체제

□ 대안 검토결과, 공적기구·민간기구 공존체제가 우리 현실에서 가장 타당한 것으로 평가

○ 정보집중 의무화에 의거 신용정보유통체제가 발전하여 온역사적 전제를 충족하면서 현존 문제점 해소 및 완전한 민간체제의 잠재적 위험요인도 예방 가능

	장 점	단 점
공적기구 전담체제	· 우량정보에 대해서도 집중을 의무화함으로써 단기간내 상당한 수준의 정보수집 및 축적이 가능	· 과도한 공적개입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 (금융회사 등은 자신이 보유한 정보를 자산으로 간주)
민간자율체제	· 금융회사 등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정보를 공유하게 되므로 다양한 정보의 수집 및 축적이 가능 ·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	· 현재 유통되고 있는 신용정보량이 당분간 축소될 가능성 (민간회사의 역량을 감안할 때, 은행연합회의 수집 기능을 대체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 소요 예상) · 자율협약에 기초함에 따라 시장실패 위험도 잠재

다. 개선방안

기 본 방 향

◆ 종합집중기관에서 수집·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는 일정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보장

◆ 민간 신용정보업자는 종합집중기관의 기초정보를 활용하고 추가정보의 수집, 정보의 가공·유통 등을 통해 개인신용평가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

➡ ‘공적기구·민간기구 공존체제’를 지향하면서 개인신용정보 집중·유통상의 부작용 방지

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정체성 정립 및 집중 정보의 안정성·정확성 제고

② 민간 개인신용정보업자(CB)의 성장기반 조성

③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④ 개인신용정보 인프라 수준, 금융회사의 개인신용 평가능력 등을 감안하여 신용불량자 등록제도의 개편방안을 신중히 검토

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정체성 정립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현재 : 은행연합회)의 성격을 「공적기능의 위탁수행자」로 정체성 정립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적기능 수행자로서의 권한 강화
- (i) 현재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한 의무적인 신용정보 집중방식은 지속
- (ii)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정보집중범위는 일정수준에서 유지
 - 추가정보의 수집 및 정보의 가공은 시장의 수요에 따라 민간자율로 활성화
- (iii)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공공정보 수집기능 확충
 - 주민등록정보,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여부 등 공공기록정보의 활용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 (iv)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집중되는 정보의 정확성 제고
 - 금융회사의 신용정보 제공지연·누락에 대한 제재 강화
 - 신용정보제공의무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 강화 및 점검의 실효성 제고

② 민간 신용정보업(CB)의 성장기반 조성

□ 종합정보집중기관의 정체성 정립 등으로 민간 신용정보업자의 장기 경쟁환경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 장기적인 전망에 입각한 투자와 영업활동을 전개하여 정보이용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시장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개발·제공

- 시스템 개선을 위한 IT확충, 전문인력 확보, 해외 CB와의 제휴확대를 통한 선진기술 도입 등 지속적인 투자
- 일부 대형카드사간에 공유중인 단기연체정보의 수집·활용 등 정보의 양과 질을 제고

□ 민간 신용정보업의 영업기반 확충

- ‘신용조회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용정보의 분석·평가업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명확히 정립

* 현행 ‘신용조회업무’ : 신용정보를 수집, 정리 또는 처리하고 의뢰인의 조회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신용조회업에 대한 법정수수료 한도제*를 폐지하여 차별적인 신용정보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유도

* 신용조회: 단말기 월 200만원/건당 3,000원

□ 감독당국에서는 금융회사 경영실태 평가시 다양한 정보(자체 보유정보, 외부로부터 수집정보 등)의 수집·활용 정도를 중점 반영

③ 개인신용정보 보호장치 강화

- 신용정보주체인 금융소비자의 본인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권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

【 예시 】

-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에 대한 철회권*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용 동의후 철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본인 신용정보 제공내역에 대한 통보요구권*

*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업자 등에 대하여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이용목적, 제공일자, 제공한 정보의 주요내용 등을 통보하도록 요구

- 준법감시인 도입 등 신용정보주체 보호를 위한 민간 신용정보업자의 내부통제 장치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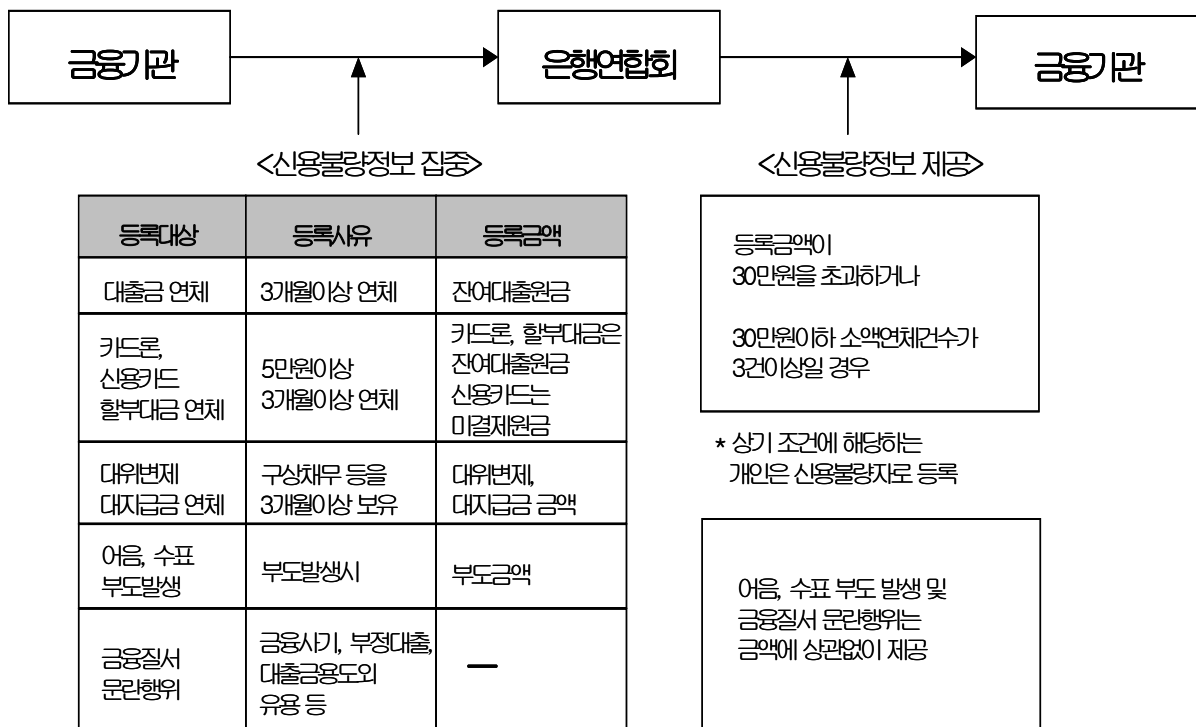
- 이동통신요금 관련 신용불량 등록체계 개선

- 단말기 할부금·통신료 연체시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입자에게 충분히 고지토록 유도

* 03.11.21일 현재 서울보증보험이 이동통신요금과 관련하여 단독(198천명) 또는 여타기관과 중복 등록한 신용불량자 수는 약 596천명

④ 신용불량자제도 개편 검토

- 현재 우리나라는 관련법률 등에서 신용불량자 개념 및 구체적인 등록범위·이용기준 등을 규율하고 있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신용불량자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 금융권 자율협약인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신용불량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에서 집중·관리
- * 3개월 이상 연체사실이 발생할 경우, 잔여대출원금 또는 미결제원금이 30만원을 초과하거나, 30만원이하 건수가 3건이상일 경우,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고 금융회사에 제공
- * 신용불량자 등록 원인이 해소된 후에도 신용불량등록 사유·등록기간 등에 따라 1~2년까지(금융질서문란자 5년) 신용불량기록을 관리



□ **현행 신용불량자제도는 개인신용평가의 기초정보 제공**
이라는 본래 목적보다는

- 신용불량자에 대한 일률적 금융거래 제한 등 제재 측면이 강조되고 있어 개인신용정보의 효율적 유통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

□ **외국의 경우 신용불량자제도를 도입·운영하지 않고 있음**

- 연체정보를 일반 여신정보와 함께 신용거래정보의 일부로 관리하며, 개인 신용도를 판단하는 정보로 활용
- 연체사실이 있는 자도 개인 신용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를 적용받는 등 금융거래가 가능

<신용불량자 제도관련 운용현황>

	신용불량자 제도 및 법적근거	연체금액 정보 등의 관리
한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신용불량자제도를 별도 운용	• 종합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에서 신용불량자를 등록·관리 • 다른 금융회사들은 이를 공유
미국	• 신용불량자제도 없음	• 메이저 Credit Bureau를 통해 금융회사들이 경제적 동기에 따라 자발적으로 연체정보 등 신용정보를 수집하여 활용
일본	• 신용불량자제도 없음	• 업권별 신용정보기관간의 교환시스템을 구축하고 연체현황정보를 교환
영국	• 신용불량자제도 없음	• 강제집중기관은 없으며 민간신용정보회사간 정보교류

□ 그러나, 현행 신용불량자 등록제도의 일부만을 변경하는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KDI 2003.8월)

* 등록기준 완화, 신용불량자 등록 세분화, 불량정보 사후관리방식 변경 등

○ 제도의 일부만을 변경하는 경우 신용불량자를 일시적으로 줄일 수 있을지 모르나,

- 장기적으로 정책의 실효성이 없고 정책의 신뢰성을 저해

- 이와 함께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화되고 채권회수가 어려워져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저하될 우려

□ 따라서 개인신용에 따른 합리적인 금융거래 및 신용정보의 효율적 유통 촉진 등을 위해 신용불량자제도를 종합적으로 개편하는 방안 검토

* 외국의 사례와 같이 신용불량자 개념을 삭제하고 연체정보 등을 신용거래정보의 일부로 관리하는 방안 등

○ 다만, 제도개편 시기는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위험평가 능력수준, 개인신용정보 관리체제의 발전정도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결정

- 향후 신용불량자 제도개편 대비 및 다양한 형태의 신용회복지원제도 운영에 따른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적극적으로 방지

(i) 개인신용정보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는 방안 강구

- 금융회사에서 차주별 채무상환내역 정보(정상상환, 채무재조정을 통한 상환 등)를 DB로 축적하고 향후 금융거래시 지속적으로 개인신용도 평가에 활용토록 유도
- 세분화된 채무상환내역 정보를 민간신용정보업자 등에서 수집하여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방안 추진

(ii) 금융회사 등이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엄격히 운영토록 유도

- 신용회복지원제도 운영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소지, 여타 기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채무조정기준을 신중히 마련·운영토록 지도
- 신용회복신청자에 대한 엄정한 심사를 통해 채무조정 대상을 선정하고, 상환조건 이행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유도

(iii) 개인 신용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 각급 교과서에 개인신용관리 및 금융이용의 중요성 등 금융소비자 관련 내용을 반영

* 교과서수록내용 초안 마련 및 세미나 개최(04.1/4분기), 관계부처 협의(04.상반기) 등 의견수렴 예정

-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 상담 및 교육활동 강화

* 청소년, 신용불량자, 채무조정확정자 등에 대해 소비생활 건전화, 신용관리방법 등 상담·교육

2. 금융회사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 개선

가. 현행 시스템의 평가

현 황

□ 은행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위험관리 시스템은 4단계로 구성

(1단계) 개인신용에 대한 기본방향 설정

- 국내외 경제 및 정책 동향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금융소비자에 대한 신용정책 방향 및 목표 설정
- * 적정 내부자본 유지전략 · 허용위험한도 설정, 경기변동 시나리오별 스트레스 테스트 등

(2단계) 구체적인 위험관리를 위한 세부 전략 마련

- 신용정책의 방향을 기준으로, 상품기획 · 운영, 이자율 및 한도기준 설정, 신용손실 대비방안 등 세부 전략 수립
- * 구체적인 영업환경에 대한 점검, 위험 측정 · 관리의 보고체계 및 내부 통제체계 설정 등

(3단계) 신용의사 결정 및 위험 관리

- 신용평가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용승인 · 거절 등 신용의사 결정 및 대손충당금의 설정, 자기자본 산출 등 위험관리
- * 신용평점 산출, 손실분포 추정 등 개인신용평가시스템 운영 및 예상 · 비예상 손실에 대해 대손충당금 · 자기자본 설정 · 운영

(4단계) 개인신용평가 시스템에 대한 환류(feed-back)

- 위험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상품운영 및 개인신용평가시스템 개선
- * 시스템의 운영의 성과분석 및 보완, 선진사례 연구 · 개발 등

□ 국내은행은 다음의 세가지 정보를 기초로 개인신용평가 시스템을 운용하여 신용의사 결정 및 위험관리 업무 수행

① 거래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 고객신상정보

* 직장관련 항목, 연소득, 재산상황, 주거상황 등

② 기존 거래고객인 경우 자행내의 전산DB에 축적되어 있는 여수신 등 거래실적정보

* 기존여수신 및 급여이체실적, 신용카드 사용실적, 연체여부·정도 등

③ 신용정보기관(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회사 등)에서 제공하는 연체정보, 여신 잔액정보 등 외부신용정보

* 대출, 할부금융 등 신용거래정보, 타금융사로부터의 조회횟수·사유 등 조회처 정보, 연체 등 불량정보, 개인채무 및 보증정보 등

□ 비은행의 금융회사의 경우 97년 경제위기 이후 개인신용평가시스템 도입이 추진되었으나,

- 규모의 영세성, 인식부족 등으로 아직 선진화된 시스템이 충분히 전파되지 못하고 있음(55개중 28개만이 시스템 구축)

구분		종금	저축은행	여전사	신협	계
대상기관수		3	21	20	11	55
구 분	감독규정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	3	21	20	11	55
	자체 신용평가 등에 의한 건전성 분류	3	7	17	1	28

평 가

- 은행 등 대형 금융회사와 신탁, 상호저축은행 등 소형 금융회사간 위험관리 능력에 큰 차이가 존재
 - 대형 금융회사는 대부분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을 도입·운영하는 등 선진 위험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 소형 금융회사는 관련시스템 구축이 지연되는 등 위험관리기능이 취약
- 아울러, 이미 도입된 개인신용평가 시스템이 아직까지 금융회사에 충분히 정착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
 - 종합적인 위험관리시스템 미구축
 - * 개인신용위험평가와 여신전략 운영 및 대손충당금 설정 등을 연계한 종합위험관리시스템 관리·운용은 미흡하며 감독당국이 제시하는 최저수준의 위험관리 요구조건 충족에 안주
 - 신용위험평가 시스템의 신축성 부족
 - *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른 고객의 신용위험 변화가 신용평가시스템에 즉각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확장위주 경영전략에 따른 시스템 운영 왜곡
 - * 신용카드사 등의 경우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외형위주 경영전략 등으로 부실채권 증가 등 건전성 저하
 - 신용평가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보유통 부족
 - * 은행연합회의 경우 불량정보 위주이고, 신용조회업자의 경우 업력이 일천하여 정보 축적수준 및 가공·평가능력이 미약

나. 개선방안

기 본 방 향

- ◆ 개인신용평가시스템 선진화 등 선진화된 위험관리체제 구축·운용은 기본적으로 금융회사의 자기책임으로 추진
- ◆ 감독당국은 금융회사에 선진화된 위험관리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지도
- ➡ 금융회사의 건전성·수익성을 제고하고 개인신용도에 따라 금융거래가 차등화되는 선진 금융관행 정착
- ① 시스템 구축상황, 업권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금융회사별 차별화된 위험관리전략 수립·추진
- ② 금융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기존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
- ③ 바젤Ⅱ 도입(2006년 시행예정)에 적극적으로 대비
- ④ 선진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의 모범사례 발굴·전파

① 금융권역별 차별화된 위험관리전략 수립·추진

□ 은행 등 대형 금융회사는 기존 시스템의 원활한 정착을 도모

- 시스템 개선, 시스템의 운영·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등 지속적인 투자
- 자체 신용평가모형에 CB 스코어 등 민간 신용정보회사의 평가결과 등을 적극 활용하여 신용평가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제고

□ 소형 금융회사는 투자여력, 업권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신의 특성에 맞는 위험관리체제 구축

-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투자여력이 있는 기관의 경우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의 구축·개선을 추진
- 독자적인 투자가 어려운 기관의 경우 외부 신용평가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위험관리

- 상호저축은행, 신협 등에서는 중앙회를 중심으로 시스템을 공동 개발하여 운영하는 방안 마련

* 고객정보는 소규모 금융회사에 분산되어 있는 것보다 중앙회에 집적되는 것이 정확성·신뢰성 측면에서 유리하며 비용절감도 가능

- 이와 함께 CB 스코어 등 신용정보회사의 평가 등을 활용

② 개인신용평가시스템 지속 개선

□ 금융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토록 유도

(i) 금융회사는 위험관리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시스템 개선을 추진

- 시스템의 유용성을 자체 점검하고 시장환경에 따라 신용평점부여체제, 적용이자율 등을 신축적으로 변경
- 장기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평가시스템(Mortgage-Scoring System) 구축 등 주택담보대출의 승인 및 금리 결정체계를 선진화
- 내부 고객정보 확충 및 외부 신용정보기관 DB의 활용 등을 통해 평가정보의 양적·질적 개선 도모

(ii) 감독당국은 금융회사의 개인신용평가 시스템 운영 상황에 대한 감독을 강화

- 은행 등 금융회사 개인신용평가모형의 적정성 점검(validation)*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모형에서 산출된 예상손실액의 사전추정치와 사후경험치와 일치하는지 확인

- 주택담보대출 취급실태 현장점검 등을 통해 금융회사가 주택담보대출 평가능력을 지속적으로 개선토록 지도
- 금융회사 경영실태평가지 리스크관리 현황을 자산건전성부문 비계량평가에 중점 반영

③ 바젤Ⅱ 도입에 대비

- 대형 은행의 경우 자체적으로 바젤Ⅱ 도입에 대비하여 포트폴리오 관리시스템*의 개선을 추진토록 유도

* 가계여신을 비슷한 위험특성을 가진 자산집단별로 구분하고 집단별 리스크를 측정하여 금융회사 자체의 위험수준을 관리하는 시스템

- 감독당국은 부도율 등 리스크 특성관련 데이터의 체계적 축적시스템 구축 지도 및 은행의 포트폴리오 관리시스템에 대한 점검 강화

—<참고 : Basel II제시 가계여신 위험관리 방법>—

- 바젤위원회는 신자기자본규제기준(New Basel Capital Accord : Basel II) 초안을 마련하고 향후 동 기준을 확정하여 현행 자기자본규제기준(1988 Capital Accord)을 대체할 방침(2006년 시행예정)
- Basel II 초안은 신용도에 따른 위험가중치 부여 등 최저자기자본 제도 개편, 감독당국의 점검강화, 시장규율을 위한 공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Basel II에서 가계여신의 경우 개별 차주에 대해 등급을 부여하지 않고 유사한 리스크 특성을 가진 자산을 묶어 집단(pool)을 구성한 후, 그 집단(pool)별로 리스크를 평가·추정토록 함
- 이는 동일한 집단(pool)내의 익스포저들이 동질적 부도특성을 보이고 손실 또한 예측가능한 행태를 보일 것이라는 가정에 입각

□ 바젤Ⅱ의 차질없는 도입·시행을 위해 감독당국, 금융회사 등으로 T/F를 운영

* 금감원, 은행, 신용평가회사 등을 중심으로 바젤Ⅱ 도입을 위한 T/F를 구성(03.11)

○ 바젤Ⅱ 도입 진행과정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제도시행을 위한 세부기준 기준 마련 및 검증·보완

《1단계》: 2004년 상반기

- 바젤Ⅱ 세부기준(안) 및 해설서(안) 협의

《2단계》: 2004년 하반기 ~ 2005년 상반기

- 바젤Ⅱ 세부기준 및 해설서 마련

《3단계》: 2005년 하반기 ~ 2006년말

- 바젤Ⅱ 기준에 대한 검증·분석 및 보완

※ 바젤위원회의 바젤Ⅱ 최종안 발표시점 등에 따라 추진 일정은 다소 변경 가능

④ 모범사례 발굴 · 전파

□ 금융권역별로 개인신용평가시스템 운영실태 조사,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모범사례 발굴 · 전파

- 관련협회, 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권역별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마련하여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발표 · 전파

* 04.상반기중 권역별로 연구팀을 구성하여 모범사례 마련 · 발표

- 은행연합회에 「개인신용평가시스템 전문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여 금융회사간 공동연구 및 정보공유

* 은행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 담당부서장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보험사 등 여타 금융회사도 포함하여 운영

□ 감독당국에서는 모범사례, 워크숍 개최 결과 등을 개별 금융회사 실정에 맞게 관련내규 등에 반영토록 유도

- 특히, 리스크관리능력이 취약한 비은행권에 대해 리스크 관리 모범기준 마련

* 자율규제기관과 공동으로 작업하여 업권별 특성 등을 충분히 반영

- 이와 함께 경영실태평가지 내규정비 수준, 개인신용평가시스템 운영상황 등을 중점 반영

부록 : 개인신용평가지시스템 개선 추진사례

1. 기본방향

① 개인신용평점을 이용한 신용측정의 정확도 제고

- 개인신용정보 수준 및 대출상품 특성에 맞는 다양한 개인신용평가모형 개발 및 운영
- 모든 대출상품에 개인신용평점시스템을 적용
- 신청평점시스템(ASS)과 행동평점시스템(BSS)의 운영체계 구축

➡ 선진화된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 BASEL II 요건 충족 및 자산건전성 제고

<참고 : 신용평점시스템의 구분>

- ▶ 신용평점시스템은 신청평점시스템(ASS: Application Scoring System)과 행동평점시스템(BSS: Behaviour Scoring System)으로 구분
- ▶ 대출신청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신청평점시스템(ASS)의 경우는 신청 당시 작성된 고객의 정보와 외부정보(CB, 은행연합회 등)를 이용하여 신용공여에 대한 의사결정을 진행
- ▶ 대출을 받고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행동평점시스템(BSS)의 경우는 예금 및 대출거래 정보 등을 추가적으로 활용하여 대출고객의 리스크를 주기적으로 측정·관리하고 추가적인 신용공여 의사결정시 반영

② 여신전략 운영체계의 다양화 · 과학화

- 개인의 상환능력을 기반으로 신용한도 부여
- 만기연장 및 채권 회수전략의 다양화
- 신규고객에 대한 합리적인 여신체계 개발
- 여신전략에 대한 평가 체계 구축

➡ 리스크 관리 및 예측능력 강화

- 일관성 있는 여신정책 · 프로세스를 통한 리스크 평가
- 고객에 대한 최적의 여신서비스 제공을 통한 상품의 만족도 제고

③ 시장상황 예측을 통한 사전적인 리스크 관리

- 잠재부실고객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 시장상황의 변화에 대응한 유연성 있는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 시장 선도적인 경쟁력 확보

- 자산건전성 제고를 통한 수익성 확대

2. 세부추진 방향

가. 개인신용평점시스템 개선

① 모든 여신 고객에게 개인신용평점시스템 적용

- 모든 여신 신청 고객에게 신청평점점수(ASS) 산출 · 적용
- 여신계약 종결시까지 매월 행동평점점수(BSS) 산정

② 신청평점시스템(ASS) 개선 → 신청고객의 리스크를 정확히 측정

- 다양한 정보를 이용하여 스코어카드 형태의 신용평점 모형 개발
 - * 고객신상정보: 연령, 직업유무, 근속년수, 주택보유여부, 현 주소 거주기간, 결혼여부 등
 - * 은행내부정보: 최근 1년간 여신거래건수, 최근 6개월 수신평잔, 여신연체정보, 최근 1년간 카드이용정보 등
 - * 외부신용정보: CB Score, 최근 6개월간 신용조회수, 최근 6개월간 카드개설정보 등
- 상품별 특성, 고객특성, 거래정도 등에 따라 스코어카드 (10개 정도) 등 신용평점모형 개발 및 운영
- 개인신용점수가 일정수준에 미달할 경우 대출 거절
- 개인신용점수가 일정수준을 상회하더라도 기타정보(단기연체, 이용카드수 등)를 감안할 때 부실가능성이 높은 고객은 대출거절 또는 회색고객(grey group)으로 분류하여 심사 강화
- 고객의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과학적 · 합리적으로 여신한도 및 가산이자율 부여

③ 행동평점시스템(BSS) 개선 → 거래정보를 기반으로 기존 고객의 리스크를 주기적으로 판정

○ 다양한 정보를 이용하여 스코어카드 형태의 신용평점 모형 개발

* 은행내부정보 : 최근 1년간 여신거래건수, 최근 6개월 수신평잔, 여신연체정보, 최근 1년간 카드이용정보 등

* 외부신용정보 : CB Score, 최근 6개월간 신용조회수, 최근 6개월간 카드개설정보 등

* 해당계좌정보 : 최근 6개월간의 연체월수, 최근 1년간의 잔고대비 입금비율/최근 3개월간 총연체금액등

○ 상품별 특성, 고객특성, 거래정도 등에 따라 스코어카드 (10개 정도) 등 신용평점모형 개발 및 운영

○ 모든 가계여신고객에 대하여 매월 한차례씩 행동평점 점수 산출

○ 여신전략 운영과정에서 신청평점점수와 함께 행동평점 점수를 중요한 요소로 반영

④ 개인단위(Customer level)의 행동평점시스템 구축 → 개인에 대한 통합적인 리스크관리 추진

* 신청평점 및 행동평점을 이용한 리스크관리는 계정단위(account level)로 이루어지고 있음

- 해당 계좌별 행동평점점수 뿐만 아니라 고객의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행동평점점수 개발·운영
- 가계여신, 자영업대출, 신용카드 이용 등에 대한 행동평점점수와 외부신용정보, CB스코어를 결합하여 개인 고객에 대한 종합적인 행동평점점수 산정
- 계정단위 및 개인단위의 행동평점을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일관성있는 채권회수전략 체계 구축

—<참고: 계정단위 및 개인단위의 리스크 측정>—

- ▶ 한 개인이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경우 두 개의 서로 다른 대출에 대하여 리스크 측정이 이루어짐(계정단위로 관리)
- ▶ 개인의 신용능력을 보다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개인단위로 모든 대출상황을 묶어서 총체적으로 평가할 필요(개인단위로 관리)

5] 추가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스코어 체계 구축

- 리스크 관리를 위한 개인신용점수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스코어 추가 개발
- 여신전략 운용시 사기대출 예측모형, 고객이탈예측모형, 수익예측모형 등에서 산출된 점수를 개인신용점수와 함께 보완적으로 활용

나. 여신전략 운영체계의 다양화 · 과학화

① 과학적인 개인의 상환능력 평가를 통한 신용한도 설정

- 개인의 소득정보 및 금융 거래정보 등을 이용한 개인상환능력 측정시스템 개발

* 상환능력 측정항목 : 최근 6개월간 저축성 수신평잔, 평균 카드 사용금액, 담보정보 등

※ 신용한도 산정방식(예시)

- 소득대별 조정계수 : 소득대별 가계지출을 고려하여 개인의 소득 Band별 흑자율 산정(범위: 0~1.0)
- 소득지수 : 부도확률, 손실률 등을 토대로 신용도를 평가하는 소득 지수 결정(범위: 0~1.0)
- 최종한도 = (년간소득 x 소득지수) x 소득대별 조정계수 - 당해 은행 대출잔액 - 타행 대출잔액 x 0.7

② 여신의 회수가능성에 따른 과학적 회수전략의 수립 · 운영

- 모든 연체고객의 회수가능성을 매월 정기적으로 평가

* 평가 항목 : 최근 6개월간 연체월수 · 연체금액, 외부 CB Score 등

- 단기 · 중기 · 장기연체 등으로 구분하여 특성에 맞는 회수 전략 추진

* Debt Control 전략(연체 1~2개월) : 회수 가능성에 따라 단순안내, 단순 연체 독촉 등의 회수활동경로(Action Path) 시나리오 구성

* Collection 전략(연체 3~6개월) : 고객의 상환의지를 평가하여 연체 대금의 상환독촉 또는 채무재조정(Payment Management Program)

* Recovery 전략(연체 6개월 이상) : 경매시기결정 또는 외부추심기관 이전 등을 결정하고 상환의지가 없는 고객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회수활동 실시

③ 고객의 상환능력 및 리스크(BSS Score기준) 등을 평가하여 만기연장 여부 및 한도·이자율 조정

- 고객의 거래정보를 기반으로 상환능력을 산정하되 필요시 소득증빙 요구

- 만기이전에도 고객신용에 문제 발생시 적극 대응

* 상환의지가 있는 경우 Payment Management Program 활용

** 상환의지가 없는 경우 적극적인 Recovery 정책 수행

④ 고객의 내부신용등급을 매월 평가하여 신규여신전략에 활용

- 잠재부실 고객을 파악하여 사전에 리스크를 관리

- 자동대출 고객의 신용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한도·이자율을 조정

- 정확한 리스크 측정을 기반으로 사전승인, 교차판매(Cross Selling) 등 마케팅 활동 지원

⑤ 여신전략 체계의 평가시스템 구축

- 「여신전략수립 → Simulation 및 Test → Monitoring 및 평가 → 여신전략 수정」을 통한 여신전략시스템의 최적화

-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IT 도움 없이 수정·변경이 용이하도록 여신전략 시스템 구축·운영

다. 시장상황 예측을 통한 사전적 리스크관리시스템 구축

① 행동평점시스템(BSS) 및 외부신용 정보를 활용하여 잠재 부실고객 도출 프로그램 운영

- 잠재부실고객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강화 등 별도 관리를 통한 연체 발생 방지

② 경제여건 변화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신속적으로 대비

- 외부 거시경제지표와 내부 운용지표가 고려된 시장상황 예측 모델개발
- 개발된 예측모델을 기반으로 정기적으로 Stress Testing을 실시하여 리스크 정책에 반영

③ 리스크 평가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여신 프로세스 및 리스크 측정 기준을 통일하여 개인단위의 여신전략에 반영하는 통합관리체계 구축

○ 리스크 평가·관리를 위한 데이터 및 시스템 정비

- * 신청 및 고객관리 프로세스 개선을 통하여 고객정보 확충 및 데이터의 정확성을 확보
- * 바젤 II 시행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확충
- * 영업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유연성 확보

○ 리스크관리 프로세스 개선

- * 개인수준의 통합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노동집약적이고 복잡한 프로세스에서 자동화되고 단순한 프로세스로 전환